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담회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기자실

## 1부 / 11:10~12:00(시청 기자실)

- 인 사
- 활동 경과 보고
- 대전시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낭독
- 질의응답

## 2부 / 12:10~13:30

- 중 식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5개 단체)

## 활동 경과 보고

<2004년>

-2004. 4. 20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전지역본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자활후견기관협회, 대전주부교실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뽕엘의집,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대전지부, 충청버스사랑동우회, 한발렛츠, 한발생협, 전교조대전지부, 민변대전지부 이상 22개 단체들이 참가한 '경전철반대 BRT 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창립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함.

-4.22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2004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BRT 시민체험행사를 개최 함.

-5. 6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전환경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충남민언련,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전지역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2004 지구의 날 기념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BRT 시민체험행사에 대한 평가, 시민토론회(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검토, BRT 도입을 촉구하는 각계 지지선언, 10만인 서명운동 및 BRT 도입을 위한 시민캠페인 추진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10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책임자 회의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참석하여 지지선언 준비 건, 버스광고, 홍보지 검토 건에 대한 논의와 BRT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다.

-5.18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부담 줄이고 생태적인 차세대 대중교통수단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권고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하다.

-5.20 교통약자 배려하는 지상 교통 시스템 BRT 전면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 100인 선언을 시청 북문주차장에서 개최하다.

-5.25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전환경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숲,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충남민언련,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전지역본부, 주부교실대전지부, 민들레의료생협, 대전경실련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YMCA 경전철 반대 BRT 전면도입을 위한 운수종사자 지지선언 개최 건, BRT 및 경전철 도입과 관련한 대전시의회 공개 질의 건, BRT 전면도입을 위한 대전시의회 의원 간담회 건, 시민토론회 기획안 검토에 대해 논의하다.

-6. 9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함.

-7.23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냄.

-11.23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없는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지속추진 반대하는 성명 발표 함.

#### <2005년>

-1.11 준공영제 관련 민노당 간담회 참석

-1. 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진옥 교통국장과의 간담회 개최

-2.2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 워크숍 개최하고, 올바른 버스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대책활동을 결의함.

-3.1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하고,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등 실무준비를 점검함.

-3.23 시내버스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우려를 표명함.

-4.22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4.24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임원단 간담회 참석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참여 요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중교통중심의 특단의 버스 개혁정책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무료환승시스템을 비롯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고 있음은 물론,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이자,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 운행 환경과는 다른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조건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누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점에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재원조달계획 및 후속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기자회견 등의 여러차례에 거쳐 간곡히 호소드린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BRT(간선버스)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가운데, 최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BRT시스템 노선과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경전철에 대한 분명한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물론, 중장기 대중교통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낮은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대전시의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실효성과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상도로 등의 구조물에 대한 철거 계획을 세우면서, 홍명상가 등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대동천변을 중심으로 지하차도 등의 대규모 구조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을 빙자한 새로운 개발사업이자, 대전시가 과연 도시교통문제를 대중교통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통해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되문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버스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이나 개선책 제시없이, 시내버스준공영제 등의 버스개혁정책의 입안 및 실행시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그간 활용율이 저조했던 시내버스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구성을 각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온 바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4월 23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민토론회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시내버스 준공영 등 관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같은 실효성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분명한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바 있다.

더욱이, 대전시는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전부터 시내버스 관련 각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내외로부터 받아 왔다는 점에서, 전혀 새롭지도 않은 방식의 “시내버스 발전위원회”를 제안한 대전시가 지금까지의 구태를 극복하고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지극히 의심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장의 경우도 시측 대표가 아닌 민간단체측 인사가 맡아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적 합의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불가피하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십분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버스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결국 시내버스 개혁의 가장 큰 목표점은 시내버스 활성화를 통한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BRT시스템 도입 및 전면적인 노선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시내버스업계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통한 표준원가상정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라는 자구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고급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의 역할을 위해서는 간선축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전면 도입, 고급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승강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대전시는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27일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5개 단체)

<참고자료 / 3월23일 기자회견문 내용>

## 대전시의 하자있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시민부담 가중시키는 버스준공영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

대전시가 4월 1일부터 무료환승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대표되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운송수입금이 떨어지는 상황을 전환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운송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도입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준비대로 라면 대전시가 운송업체에 지불할 보조금은 2004년 기준으로 3.3배 정도가 늘어나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가 사양길에 접어든 대중교통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써 유효한 장치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는데 대전시, 버스업계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에 대한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준공영제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BRT시스템 도입은 기약이 없는 채로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 추진에 이어, 지난 해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4, 5호선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시민을 볼모로 한 대중교통정책의 난맥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6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버스업계에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버스업계는 계속되는 승객 감소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운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준공영제의 도입을 통해 만성적자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버스업계의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선행조건으로 대전시와 버스업계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 보조금에 의존해온 버스업계의 구태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13개 버스업체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된 재무구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와 업계의 재무구조 개선노력 없이 시행되는 버스준공영제는 약 100억원의

운영비용과 무료 환승에 따른 버스업계 손실보전액인 약 100억원 등 연간 총 200억원의 손실을 대전시와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운영의 정시성,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준공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준공영제의 도입과 맞물려 굴곡장대인 대전의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과 같은 굴곡장대의 버스노선을 유지한 채 승객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하며,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는 버스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개혁이 대전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음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와 같은 승용차 중심의 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화석연료의 이용 증가에 따른 대기 질 악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중교통중심의 도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철저한 공공성의 원칙에 근거해 버스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23일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4개 단체)